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29.(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9월 29일(화)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의원	노종용	☎044-300-7177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200억원 규모 사업, 검증도 기준도 없이 출발하나”

- 중3 5,400명 대상 사업… 법적 근거·수요조사·안전·재정 지속가능성 집중 점검 -
- “교원 우려를 단순 반대로 보지 말아야”… 학생·학부모·교원 목소리 경청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노종용 의원(연기·연동면 해밀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 설계, 수요조사,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 안전관리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노종용 의원은 중학교 3학년 전체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학생 자부담과 지원 기준의 법적 근거, 실제 참가 수요, 방문기관과 프로그램, 항공편 확보와 안전관리 기준 등 사업의 핵심 사항이 상당 부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대규모 공교육 사업일수록 사업 추진보다 검증과 기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노 의원은 학생 1인당 35만원인 자부담금을 언급했다. 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진로교육 중심의 방학 중 희망 참여 프로그램

램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의 법적 성격과 자부담·지원체계에 대해 별도의 법률검토나 법률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행 「진로교육법」과 관련 조례에 지원기준을 규정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 참가학생에게는 35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한 만큼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부담시킬 것인지부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청이 제시한 통계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교육청은 세종 학생 1인당 진로체험 횟수 1.20회를 주요 사업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중학교 3학년만을 따로 산출한 수치가 아니라 초·중·고 전체를 포괄해 제시된 지표이며, 같은 자료에서 중학생의 진로체험 횟수는 2.59회로 나타났다. 진로전담교사 배치율과 ‘진로와 직업’ 과목 채택률 등 일부 지표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교육청이 제시한 방문기관 상당수는 업체 선정과 협상 이후 확정될 예정이고, 일부 예시 기관은 교육청이 계획한 60명 단위 체험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겨울방학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아, 특정 국가에 신청이 몰릴 경우 학생의 진로희망이 아니라 확보 가능한 항공편과 좌석에 맞춰 국가나 코스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유명 기업이나 대학을 방문한다는 것과 학생이 실제 직업세계와 연계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기관 수용능력과 전문가 멘토링, 항공편 확보 등 실제 운영 가능성부터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와 교원 참여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현재 공통적인 안전관리 틀은 마련돼 있으나 15개 코스별 위험성 평가와 상세 안전관리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학생 인솔에 참여할 교원의 규모

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 의원은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인솔 부담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히 경청해야 하며, 교원들의 우려를 단순히 사업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실효성도 짚었다. 교육청 일정대로라면 11월 하순 계약을 체결한 뒤 학교별 학운위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계약의 큰 틀이 정해진 이후 국가·코스·자부담·프로그램을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법정 심의가 이미 정해진 계획을 사후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도 짚었다. 노 의원은 “올해 한 번 2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과 매년 같은 규모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재원 마련 방안과 성과에 따른 다음 연도 투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사업의 성과는 몇 명을 해외에 보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어떤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진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유명 기업의 이름 몇 개, 해외 도시 몇 곳, 5,400명이라는 규모가 그 자체로 진로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출발을 서두르는 것보다 출발하기 전에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학생을 위한 책임 있는 교육정책”이라고 말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